

(2019. 4. 6. 시행) 국가직 기출문제 [행정학(나 책형) 해설]

[김 종 욱 선생님]

제일고시학원 본점(충남대앞)중앙로점 www.okpass.com

문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②

해설: ②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는 것은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 비해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이다.

문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총리령이 틀린 내용이다.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문 3. 지방자치법 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19. 기출문제 해설

정답 : ④

해설 : ④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개폐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 조례개폐청구제외대상

- ①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 ③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문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 ① 지시적 위임형
- ② 협상형
- ③ 재량적 실험가형
- ④ 관료적 기업가형

정답 : ④

해설 : ④ 정책집행자가 '주어'로 시작되는 내용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관료적 기업가형(bureaucratic entrepreneur)은 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여 정책과정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는 유형(예: 8명의 대통령 밑에서 FBI 국장직을 수행한 Hoover)이다.

문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②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②는 올바른 내용이다.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는 공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부산물이 아닌 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다.

■ 공무원헌장

-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문 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소비자원 ③ 국립중앙극장 ④ 한국연구재단

정답 : 정답없음

해설 : ③ 국립중앙극장이 가답안으로 발표되었으나 문제 출제상 오류로 판단된다. 2019년 4월 현재 국립중앙극장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 : 정부기업)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답이 없는 문제에 해당된다.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소비자원 ④ 한국연구재단은 모두 공공기관(준정부부처)이고, ③ 국립중앙극장은 문체부에 소속된 책임운영기관이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18. 12. 31.>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

일반회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1. 국립국제교육원	1. 국립생물자원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화학물질안전원(「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2. 통일교육원	
3. 국방홍보원	
4. 국방전산정보원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국립중앙극장	
9. 국립현대미술관	
10. 한국정책방송원	
11. 한국농수산대학	
12. 국립중자원	
13.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4. 국토지리정보원	
15. 항공교통본부	

16. 국립수산과학원	
17.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8. 국립해양측위정보원	
19. 국세상담센터	
20.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1. 통계개발원	
22. 경인지방통계청	
23. 동북지방통계청	
24. 호남지방통계청	
25. 동남지방통계청	
26. 충청지방통계청	
27. 국립문화재연구소	
2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9. 공능유적본부	
3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1. 국립축산과학원	
32. 국립산림과학원	
33. 국립수목원	
34. 항공기상청	
35. 국립기상과학원	
36. 해양경찰정보비창	

문 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정답 : ③

해설 : ③은 올바른 내용이다.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라고 본다.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한다. ④ 쿠바미사일 위기 사건과 같은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세가지 모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문 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 ④

해설 : ④ ㄱ. 내용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올바른 내용이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가 민간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ㄷ. 민간기관에 의한 규제는 자율규제와 공동규제가 있다. 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을 말하며,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문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0조).

문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위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 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답 : ①

해설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에서나 출제될 수 있는 상당히 세부적인 문제이다. 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52년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제정 지방자치법에는 시·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 ② 박정희 정부(3공화국 헌법)부터 전두환 정부(5공화국 헌법)까지는 지방자치가 중단되었으며, 노태우 정부(6공화국 헌법, 1988년)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였다. 노태우 정부(1991년)에서 시·군·자치구 의원과 시·의원 선거만 실시되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제1회 지방동시선거)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④ 현재도 기초와 광역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다.

■ 참고자료 : 건국이후의 지방자치(출처 : 한권으로 끝내는 지방자치론 -김종욱 편)

1. 제 1·2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

(1) 제정 지방자치법 : 제헌헌법의 지방자치규정에 의해 1949년 제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서울특별시·도와 시·읍·면의 5종으로 하고, 도와 특별시는 정부직할하에 두고 시·읍·면은 도의 관할하에 두었다(서울특별시는 단층제, 도는 2층제).
 -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 시장 - 의회형 구조의 기관대립형
 - ③ 서울시장과 도지사(국가공무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지방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에서 간선
 - ④ 지방의원은 4년 임기의 명예직으로서 선거로 직접 선출, 지방의회의 의결권에는 제한주의 채택
 - ⑤ 시·읍·면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시·읍·면장의 의회해산권 부여 →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함
 - ⑥ 기능배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전형적인 포괄적 수권형 채택) 과연 어떤 사무가 공공사무(자치사무)이고 어떤 사무가 위임사무인지 알 수 없으며, 중앙-도-시·읍·면간의 기능배분도 되어 있지 않았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단위 : 도에는 군(郡)을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區)를 두며, 시·읍·면에는 동(洞)과 리(里)를 두었다. 군수와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동장과 이장은 동·리의 주민이 선거하도록 하였다.
 - ⑧ 주민통제방법으로 선거권외에 민중출소제도 채택 : 조례 또는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직접 감독관청이나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게 하였다.
- ※ 한국전쟁으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다가, **1952년 제1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최초로 근대적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시·읍·면장을 선출하여 민주적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됨), 1956년에 제2대 지방의회, 1960년에 제3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2) 지방자치법 2차 개정(1956.2)

- 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진 불신임의결제도의 폐단으로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예속화 현상 발생
- ② 시·읍·면장 주민직선제,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 및 지방의회해산권 폐지 → 지방자치법 4차 개정(1958.12) : 시·읍·면장 직선제를 임명제로 전환

(3) 제 2공화국의 지방자치

- ①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 선임방법은 법률로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장은 그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자기선임원칙을 헌법상 보장
- ② 지방자치법 5차 개정(1960년) : 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과 지방의원, 동장과 이장까지 모두 주민이 직접선출 → 건국 이래 최초로 모든 지방정부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선거에 의해 구성

2. 제 3공화국 이후의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중단

(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년)에 의한 지방자치 중단

- ① 읍·면자치제의 폐지와 군(郡)자치 체계의 규정 : 읍·면을 일반 지방행정기관으로 전환, 일반 지방행정기관이던 군을 지방정부로 전환
- ② 자치단체장 임명제
- ③ 지방의회의 해산과 중앙정부와 상급단체장이 지방의회의 기능 대신
- ④ 서울특별시의 국무총리 직속화와 부산시의 정부직할시 승격

(2) 제 3공화국 헌법

제 3공화국 헌법에도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제도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법률제정을 회피함으로써 그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3) 제 4공화국 헌법(유신헌법)

제 4공화국 헌법에도 지방자치제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부칙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있다.

(4) 제 5공화국 헌법

제 5공화국 헌법에서도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조항을 두었으나, 부칙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미루어 왔다.

IV. 지방자치의 부활 - 제 6공화국 헌법

1. 지방자치법 7차 개정(1988년) : 현재 운영되는 지방자치의 기본 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자치구의 2층제로 구분.
- ②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지방의회의 종류별로 달리 정하였고,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층별로 사무배분기준을 정하였다.

2. 지방자치법 12차 개정(1994.3) :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 ①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계속 지연되다 김영삼정부에 들어와서 지방자치법 12차 개정을 통해,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이룩
- ②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규정, 주민투표제 도입

3. 지방자치법 13차 개정(1994.12)

- ①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칭하고, 광역시안에 군을 둘 수 있게 함, ② 단체장의 재임을 3기로 제한

4. 지방자치법 19차 개정(1999.8)

- 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도입
- ②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의결기능으로 강화하고, 감독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함
- ③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④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소속 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문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② 사회적 인간관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④ 복잡한 인간관

정답 : ①

해설: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에 대한 설명이다.

문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평정법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③ 중요사건기록법 ④ 강제배분법

정답 : ④

해설 : ④ 강제배분법에 대한 설명이다.

문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③ 국공채는 미래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실현에 기여한다.

문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정답 : ③

해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행정관청으로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관청)'이다.

문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정답 : ④

해설: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신조류의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전통적 리더십인 거래적 리더십과 구별된다.

문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 ②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정답 : ④

해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1차 결과(성과)가 1차 결과(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의 강도이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유인가이다.

문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정답 : ②

해설: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 유연근무제의 형태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64호)

유 형	활 용 방 법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	▶기본개념 :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신청시기 : 수시 ▶보수 및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탄력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실시기간 : 1일 이상

유 형	활 용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매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시 2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집약 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매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
	재량 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신청시기 : 수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스마트 워크 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문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 된다.

- ① 역할연기 ② 직무순환 ③ 감수성 훈련 ④ 프로그램화 학습

정답: ③

해설: ③ 조직발전의 기법으로 감수성 훈련(실험실 훈련)에 관한 내용이다.

문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문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정답: ①

해설: ①은 올바른 내용이다.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계획예산제도이다.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주의예산제도이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는 구성원의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지향의 예산제도로써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구별된다.

문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예산의 전용은 이용과 달리,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